

 COMMENT

선행행정학 100% 완벽적중

2021 국회9급 행정학 문제는 참신하고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출제의도가 약간 불분명하여 정답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도 일부(문1의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 문17의 주민직접청구제도문제 등) 있었고 국회만의 지역적이고 독특한 버전의 문제(문13의 행정규제기본법 제정시기)도 있었지만 그런 일부 문제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변별력이 있고 좋은 출제였다고 봅니다.

7급수준의 고난도 문제도 많았습니다. 문4의 지방재정문제, 문7의 정치와 행정관계에 관한 학자들의 주장, 문18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문19의 국회 예결산 심의절차, 문20의 정부규제문제 등이 바로 그런 문제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문 구성을 어느 하나의 주제에 국한시키지 않고 여러 주제를 종합하여 출제한 복합형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즉, 예산제도 전반, 국회 예산심의절차 전반, 정부규제 전반, 근무성적평정기법 전반, 공익의 본질 전반, 정책결정모형 전반, 리더십 전반, 정책분석기법 전반, 공공기관의 유형 전반, 공무원 인사관리 전반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행정학을 단편적인 암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위주로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고 이러한 경향은 최근 행정9급과 7급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니 학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규

정책의 시행과 결과 간 인과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위험 요인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 ① 성숙요인 ② 역사요인
- ③ 선발요인 ④ 상실요인
- ⑤ 회귀요인

2021 9급 선행정학 p.309

정답 · 해설

답 ②

출제 의도가 불분명하여 약간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인과적 타당성 즉,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 중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성격인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외재적 요인과 내재적 요인을 기준으로 보면 선발요인만 외재적 요인이고 나머지는 모두 내재적 요인이므로 ③이 정답이 될 수 있지만, 출제자는 실험대상자들의 특성(행태) 관련요인과 외부사건 관련요인을 기준으로 문제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경우 ②의 역사요인만 외부사건 관련요인이고 나머지는 모두 실험대상자들의 특성이나 행태가 변화하여 발생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는 문헌에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여전히 논란이 될 수 있다.

☞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외재적 요인과 내재적 요인

구분	개념	해당요소
외재적 요인	집단구성시 발생 (서로 다른 개인들을 할당함으로써 발생하는 편견)	선발요소
내재적 요인	실험(정책)이 진행(집행)되는 동안 평가과정에 스며들어 나타나는 변화	역사적 요소(사건효과), 성숙효과(성장효과), 상실요소, 회귀인공요소, 측정요소, 오염효과, 누출(이전)효과, 측정도구의 변화,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보기〉의 리플리와 프랭클린(R. B. Ripley & G. A. Franklin)의 정책 유형과 정책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 ㄱ. 권리나 이익, 서비스를 사회의 특정 부분에 배분하는 정책
- ㄴ. 다수 경쟁자 중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특정 권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 ㄷ.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 ㄹ. 일반 대중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 정책

	ㄱ	ㄴ	ㄷ	ㄹ
① 노령연금제도	항공노선 허가	최저임금제	개발제한구역	
② 사회간접자본	개발제한구역	최저임금제	방송국 인가	
③ 노령연금제도	개발제한구역	누진소득세	방송국 인가	
④ 사회간접자본	항공노선 허가	누진소득세	개발제한구역	
⑤ 노령연금제도	방송국 인가	최저임금제	누진소득세	

2021 9급 선행정학 p.197

정답 · 해설

답 ④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기준으로 정책을 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유형화하였다. 옳게 연결된 것은 ④이다.

- ☑ ㄱ 배분정책(사회간접자본, 국공립학교 등)
- ㄴ 경쟁적 규제정책(방송국 설립인가, 항공노선 취항인가 등)
- ㄷ 재분배정책(누진세, 실업수당 등)
- ㄹ 보호적 규제정책(환경보호, 개발제한구역, 안전규제 등)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기관의 결원은 신규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
- ② 임용권자는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③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시보로 임용할 수 있으며, 시보기간 동안 정규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위와 신분이 보장된다.
- ④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상호 간에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전입하려는 때에는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 ⑤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 상호간, 행정기관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2021 9급 선행정학 p.521

정답·해설

답 ③

시보공무원은 정규공무원과 동일한 **신분보장을 받지 못한다**. 시보기간 중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성적이 부족한 경우 면직이 가능하고 면직이 되어도 소청을 제기할 수 없다.

- ☒ ① [○] 결원보충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지문
- ② [○] 지방인재 균형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지문
- ③ [○] 전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지문
- ④ [○] 인사교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지문

Ripley & Franklin의 정책 유형

정책분류	개념	예시
분배정책	행정서비스의 제공이나 이득·기회의 배분과 관련된 정책	사회간접자본 구축,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 제공
경쟁적 규제정책	다수의 경쟁자 중에서 경쟁범위를 제한하려는 정책(진입규제 등)으로 희소한 자원의 배분과 관련된 정책	TV나 라디오 방송권의 부여, 항공노선 취항권의 부여
보호적 규제정책	민간활동이 허용 또는 제한되는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일반대중을 보호하는 정책	작업장 안전을 위한 기업 규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식품위생 규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기업 규제
재분배 정책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누진세를 통한 사회보장 지출 확대 등

Ripley & Franklin의 정책유형별 특징

	루틴화	관계안정성	반발과 감축압력	원만한 집행
분배정책	용이	높음	낮음	용이
경쟁규제	보통	낮음	보통	보통
보호규제	곤란	낮음	높은 편	보통
재분배정책	곤란	높음	높음	곤란

* 규제정책 중 보호적 규제가 본질적 규제로 대부분의 규제정책은 여기에 해당

→ 정책결정전에 미리 승패가 결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세입에 대비하여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일반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된다.
- ② 조정교부금이란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균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조정제도를 말한다.
- ③ 국고보조금은 사용의 용도나 조건이 정해져 있으며 지방정부는 보조금을 주는 중앙부처가 지정한 용도와 조건에 맞게 지출해야 한다.
- ④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지출의 용도가 자유로운 일반보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재량권이 상당히 보장된다.
- ⑤ 국고보조금의 구체적인 세출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사후적인 배분내역만을 공개하고 있다.

배치전환(수평적 인사이동)의 종류

전입	① 인사관할을 달리 하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상호 간 수평적 인사이동 ② 전입시험을 거치는 것이 원칙(예외적으로 면제 가능)
전직	①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 ② 전직시험을 거치는 것이 원칙(예외적으로 면제 가능)
전보	①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 ② 전보제한기간(원칙 3년, 예외 2년) ↳ 필수보직기간
파견	① 국가적 사업을 지원하거나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소속을 바꾸지 않고 타 기관에 일정기간 근무 후 복귀하는 제도 ②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 필요
겸임	①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직무가 유사하고 지장이 없을 시 일반직을 특정직 직위 등에 겸임하게 하는 것 ② 겸임기간 : 2년 이내

2021 9급 선행정학 p.833

정답 · 해설

답 ⑤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출내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용도로만 지출 가능한 특정재원이다.

- ☑ ① [○] 재정자주도는 전체재원중에서 일반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 ② [○] 조정교부금은 광역단체차원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 ③ [○]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달리 용도가 정해진 특정재원이다.
- ④ [○] 지방교부세는 국고보조금과 달리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 즉 재량재원이다.

다음 공공기관 가운데 그 유형이 다른 하나는?

- ① 예금보험공사 ② 한국지역난방공사
③ 한국자산관리공사 ④ 한국주택금융공사
⑤ 한국무역보험공사

2021 9급 선행정학 p.425

정답 · 해설

답 ②

한국지역난방공사만 공기업(시장형공기업)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속한다.

☒ ①③④⑤ [×] 준정부기관

② [○] 공기업

공공기관의 유형

공기업	시장형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공항공사(인천국제, 한국), 항만공사(부산, 인천),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부발전(주) 등 5개 발전회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주)강원랜드 등(총 16개)
	준시장형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위탁집행형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소비자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재정정보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기타공공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시발전재단 등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비교

구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근거	지방교부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재원	내국세의 19.24% +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45% + 종합부동산세 전액 + 정산액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지원 - 재량에 의한 보조
용도	용도 지정이 없는 일반재원(기본행정수요경비)	특정재원으로 구체적인 보조목적 사업(국가정책과 정책적 고려)
지방비 부담	없음(정액보조) - 현금보조적 성격	있음(정률보조) - 현물보조적 성격
재량(통제)	많음(약함)	거의 없음(강함)
기능	재정의 형평화(형평화 보조금)	자원배분의 효율화(효율화 보조금)
조정의 성격	수직적 · 수평적 조정재원	수직적 조정재원
교부주체	행정안전부장관	중앙관서의 장(주무부장관)

〈보기〉의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 사항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 ㄱ. 예산은 가능한 한 모든 재정활동을 포괄하는 단일의 예산 내에서 정리되어야 한다.
- ㄴ.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
- ㄷ. 정해진 목표를 위해서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ㄱ	ㄴ	ㄷ
①	추가경정예산	전대차관	이용과 전용
②	특별회계	예비비	준예산
③	추가경정예산	이용과 전용	계속비
④	특별회계	계속비	수입대체경비
⑤	추가경정예산	순계예산	특수활동비

2021 9급 선행정학 p.608

정답 · 해설

답 ①

①만 옳게 연결되어 있다.

- ☑ ㄱ 단일성의 원칙(예외 : 추경예산, 특별회계, 기금)
 - ㄴ 완전성의 원칙 또는 예산총계주의(예외 : 현물출자, 차관전대, 수입대체경비)
 - ㄷ 한정성의 원칙(예외 : 이용과 전용, 예비비, 이월 등)

고전적 예산의 원칙과 예외

전통적 예산원칙	
공개성의 원칙	국민에 대한 재정활동의 공개(예외 : 신임예산, 기밀정보비)
명료성의 원칙	국민 · 국회의 이해 용이(예외 : 총괄예산)
완전성의 원칙	예산총계주의(예외 : 순계예산, 현물출자, 차관전대, 수입대체경비 등) 완-현차수
단일성의 원칙	단수예산(예외 : 특별회계, 추경예산, 기금) 단-추특기
한정성의 원칙	① 질적 : 목적 외 사용금지(예외 : 이용, 전용) ② 양적 : 금액초과 사용금지(예외 :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③ 시간적 : 회계연도독립(예외 : 이월, 계속비)
통일성의 원칙	전체세입으로 전체세출에 충당해야 한다는 수입금직접사용금지 원칙(예외 : 특별회계,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기금) 통-목수특기
사전승인 원칙 (절차성의 원칙)	국회의 사전승인(예외 : 준예산, 사고이월, 전용, 예비비, 긴급명령, 선결처분)
정확성의 원칙	예산과 결산의 일치

정치와 행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윌슨(W. Wilson)은 '행정의 연구'에서 정치와 행정의 유사성에 초점을 두고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② 사이먼(H. Simon)은 '행정행태론'에서 정치적 요인과 가치문제를 중심으로 조직 내 개인들의 의사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 ③ 애플비(P. Appleby)는 '거대한 민주주의'에서 현실의 행정과 정치 간 관계는 연속적, 순환적, 정합적이기에 실제 정책형성 과정에서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 ④ 굿노우(F. Goodnow)는 '정치와 행정'에서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 정치이며, 이를 실행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규정하였다.
- ⑤ 왈도(D. Waldo)는 '행정국가론'에서 사기업 영역의 관리이론을 공공부문에 적용할 경우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021 9급 선행정학 p.4

정답 · 해설

답 ④

④ 굿노우에 대한 설명만 옳게 되어있다.

- ☑ ① [X] 윌슨은 「행정의 연구」에서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강조하였다.
- ② [X] 사이먼은 「행정행태론」에서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사실중심**의 연구를 강조하였다.
- ③ [X] 애플비는 「정책과 행정」, 「정부는 다르다」, 「거대한 민주주의」 등에서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행정의 정치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 ⑤ [X] 왈도는 「행정국가론」에서 행정이 가치중립적이라는 행태론적 시각을 비판하고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한 능동적이고 **가치지향적** 관점으로 행정을 재정의하였다.

주요 학자별 저서와 내용

학자	저서(연대)	주요내용
W. Wilson	행정의 연구(1887)	행정은 정치가 아닌 경영. 정치행정이원론. Pendleton 법을 이론적으로 뒷받침. 행정학의 창시자
Goodnow	정치와 행정(1900)	정치(국가의사의 결정)와 행정(국가의사의 실천 · 집행)의 엄격한 구분. 정치행정이원론
M. Weber	관료제(1901)	관료제의 창시자. 계층제 형태의 이념형 관료제가 이상적이라고 주장
F. Taylor	과학적관리법(1911)	시간연구 & 동작연구, 성과급 등 과업관리. 과학적 관리론의 선구자
L.D. White	행정학입문(1926)	최초의 행정학 교과서. 행정이란 사람과 물자의 관리임을 강조
Gulick & Urwick	행정과학논총(1937)	최고관리층의 7대 기능(POSDCoRB). 행정관리설의 대표적 모형
M. Dimock	현대정치와 행정(1937)	정치와 행정은 연속적 · 정합적 개념(정치행정일원론). 사회적 능력 중시
H.A. Simon	행정행태론(1945)	행정은 합리적 의사결정. 가치와 사실의 분리. 논리실증주의 도입. 원리주의 비판. 정치행정새이원론
Gaus	행정에 대한 반성(1947)	생태론 도입. 정치와 행정의 연계 중시
P. Appleby	정책과 행정(1949)	「거대한 민주주의」에서 행정과 정치는 융합적 · 연속적 관계. 정치행정일원론. 「정부는 다르다」에서 공사행정이원론 제창
D. Waldo	행정국가론(1948)	행정이 가치중립적이라는 행태론적 시각을 비판.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한 능동적 · 가치지향적 행정 강조

정책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용편익분석에서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자본시장에서 형성된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비용편익분석 대상이 되는 대안들을 비교하기 위해 순현재가치법, 비용편익비율법, 내부수익률법 등이 사용된다.
- ③ 델파이(delphi) 기법은 전문가들이 상호 간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서면으로 여러 차례 상호 피드백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이다.
- ④ 정책델파이는 전통적 델파이 기법과 같은 수준의 익명성을 유지하지만, 전문가 외에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정책 대안을 탐색하는 기법이다.
- ⑤ 계층화분석법(Antalytic Hierarchy Process)은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 기준이 다수이며 복합적일 경우, 이를 계층화하여 세부 요인들로 분해한 후 각 요인들을 상호비교하여 상대적인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2021 9급 선행정학 p.228

정답 · 해설

답 ④

정책델파이는 끝까지 응답자들의 익명성을 유지하는 전통적인 델파이와 달리 처음에는 익명성을 유지하다가 어느 정도 결론이 표면화되고나면 공개적인 토론을 벌인다. 따라서 선택적 익명성을 추구한다.

- ☒ ① [○] 공공부문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는 공공부문이 시장에 비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 ② [○] 비용편익분석 평가기준에 대한 맞는 설명이다.
- ③ [○] 델파이기법(전통적 델파이)은 응답자들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익명성을 끝까지 유지한다.
- ⑤ [○] 계층화분석법(AHP)에 대한 맞는 설명이다.

전통적 델파이와 정책델파이의 비교

구분	전통적 델파이	정책델파이
적용	일반문제(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예측	정책문제(정책적인 문제)에 대한 예측
응답자	동일영역의 일반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식견 있는 다양한 창도자
익명성	철저한 격리성과 익명성 보장	선택적 익명성 보장(나중에 상호 교차토론 허용)
통계처리	의견의 대표값 · 평균치(중위값) 중시	의견차이나 갈등을 부각시키는 양극화(이원화)된 통계처리
합의	합의(근접된 의견) 도출	구조화된 갈등(극단적이거나 대립된 견해의 존중 · 유도)
토론	없음	컴퓨터를 통한 회의 및 대면토론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권한이 아닌 것은?

- ① 행정사무 감사 ② 주민투표 청구
- ③ 통할대표 ④ 의안 발의
- ⑤ 지방의회 조직 및 운영

2021 9급 선행정학 p.810

정답 · 해설

답 ③

통할대표란 자치단체를 통할하고 외부에 대표한다는 의미로 이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능을 한다.

☑ ①②④⑤ [오] 모두 지방의회의 권한에 해당한다.

☞ 자치단체장의 권한

- ① 통할대표권¹⁾
- ② 사무의 관리집행권
- ③ 지휘감독권
- ④ 규칙제정권
- ⑤ 기관시설의 설치권
- ⑥ 임면권
- ⑦ 선결처분권
- ⑧ 재의요구권
- ⑨ 지방채 발행권

1) 주민의 대표가 아니라 자치단체를 대외적으로 대표한다.

〈보기〉의 내용을 조직이론의 발전 과정에 따라 고전적 조직이론 → 신고전적 조직이론 → 현대적 조직이론의 순서로 배열한 것은?

〈보기〉

- ㄱ. 조직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동태적이고 유기체적인 존재로 파악한다.
- ㄴ. 인간의 감정적 · 정서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인다.
- ㄷ. 과학적 관리론과 관료제 등이 대표적이다.
- ㄹ. 상황이론과 자원의존이론 등이 대표적이다.
- ㅁ. 행정의 체계화와 합리화, 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ㅂ. 호손실험연구 등을 포함한 인간관계학파가 대표적이다.

- ① (ㄱ, ㄷ)→(ㄴ, ㅂ)→(ㄷ, ㅁ)
- ② (ㄴ, ㄷ)→(ㄷ, ㅂ)→(ㄱ, ㅁ)
- ③ (ㄴ, ㅂ)→(ㄱ, ㄷ)→(ㄷ, ㅁ)
- ④ (ㄷ, ㅁ)→(ㄱ, ㄴ)→(ㄷ, ㅂ)
- ⑤ (ㄷ, ㅁ)→(ㄴ, ㅂ)→(ㄱ, ㄷ)

2021 9급 선행정학 p.330

정답 · 해설

답 ⑤

Waldo는 조직이론은 중점변수에 따라 고전적 - 신고전적 - 현대적 조직이론으로 구분하였다. 옳게 연결되어 있는 지문은 ⑤이다.

- ☑ ㄱ 개방체제론으로 **현대적 조직이론**에 해당한다.
- ㄴ 인간관계론 등 **신고전적 조직이론**에 해당한다.
- ㄷ **고전적 조직이론**에 해당한다.
- ㄹ 거시조직론으로 **현대적 조직이론**에 해당한다.
- ㅁ **고전적 조직이론**에 해당한다.
- ㅂ **신고전적 조직이론**에 해당한다.

☞ 조직이론의 변천(D.Waldo)

구분	변수	특징(중점)
고전적 조직이론	구조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 이론, 행정관리설 등 공식적 구조 중시
신고전적 조직이론	인간	인간관계론 등 사회적 · 비공식적인 요소 중시
현대적 조직이론	환경	개방체제론, 거시조직론 등 환경 중시

↳ 거래비용경제학 등

다음 리더십 유형 중 리더와 조직구성원의 관계를 점점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동기수준으로 서로를 이끄는 상호관계로 접근하지 않는 것은?

- ① 진성 리더십 ② 카리스마적 리더십
③ 변혁적 리더십 ④ 윤리적 리더십
⑤ 서번트 리더십

2021 9급 선행정학 p.377

정답 · 해설

답 ②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리더가 부하와의 상호고관계를 중시하기 보다 리더의 뛰어난 자질이나 초인적인 힘 등에 의하여 부하들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자질론에 해당한다.

- ☑ ① [○] 진성 리더십 또는 진실한 리더십(신뢰감을 주는 리더십 : authentic leadership)이란 자기가 어떤 사람이며 자기의 가치관과 신념은 무엇인지 알고 그에 일관되게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의 리더십이다. 진실한 리더십은 리더가 그의 가치관에 따라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여 추종자들이 리더를 신뢰하고 따르게 만드는 리더십이다. 진실한 리더십이 만들어 내는 핵심적 자산은 신뢰이다.
- ③ [○] 변혁적 리더십이란 보상과 교환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거래적 리더십과 달리 안정보다는 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현대적 리더십을 말한다. 변혁적 리더십의 특성에는 영감적 동기부여, 카리스마적 리더십, 지적자극, 개별적 배려 등이 있다
- ④ [○] 윤리적 리더십이란 윤리성에 기반을 두고 리더의 개인적 행동과 대인관계를 통하여 적절한 윤리적 행동을 보여주면서 쌍방소통을 통하여 구성원들을 윤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리더십이다.
- ⑤ [○] 서번트(servant) 리더십은 발전적 리더십 또는 섬기는 리더십으로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추종자)에게 초점을 두고, 부하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헌신 봉사하는 리더십이다.

리더십의 유형(오석홍)

행태론의 유형	권위형	임무중심의 지시 · 명령형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개념 (중첩)
	민주형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하는 부해(인간관계)중심형	
	방임형	구성원의 자유행동에 의존(리더로서의 의미X)	
거래형과 변혁적 리더십	거래형	성과(노력)와 보상간 거래와 교환 중시(조건 보상과 예외 관리)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개념 (중첩)
	변혁적 리더십	안정보다는 변화를 추구하며 영감적 동기부여, 카리스마적 리더십, 지적자극, 개별적 배려 등 중시	
기타 리더십	카리스마적	리더의 특출한 능력으로 추종자들의 헌신과 일체감을 유도하는 리더십	
	영감적	미래에 대한 구상(비전) 공유	
	서번트 리더십	변동에 헌신하는 리더십으로 종복(하인)정신(servantship)이 핵심. 부하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리더의 봉사정신 강조가 변혁적 리더십과의 차이	
	분배된	단일의 지도자가 아닌 여러 사람에게 분배된 공유된 리더십	
	촉매적 리더십	연관성 높은 공공문제를 다루는데 촉매역할을 하는 리더십 ⇨ 정부부문에 요구되는 리더십	
	진실한 리더십	리더를 신뢰하고 따르게 만드는 리더십으로 리더의 솔직 · 투명하고 윤리적인 행동이 핵심	
	윤리적 리더십	리더가 부하에게 윤리적 수법을 보임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점증모형은 정책결정을 다양한 정치적 이해를 가진 당사자들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한다.
- ㄴ. 만족모형은 제약조건 하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전제로 한다.
- ㄷ. 합리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
- ㄹ. 혼합탐색모형을 주장한 Etzioni는 정책결정 설명모형의 기술적 타당성을 높이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ㄴ, ㄷ ④ ㄴ, ㄹ
- ⑤ ㄷ, ㄹ

2021 9급 선행정학 p.255

정답 · 해설

답 ①

ㄱ, ㄴ만 옳다.

- ☑ ㄱ [○] 점증모형은 당사자들간 타협에 의한 정치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모형이다.
- ㄴ [○] 만족모형은 제약된 조건하에서의 합리성 즉,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한다.
- ㄷ [×] 합리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이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한다.
- ㄹ [×] 혼합주사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결합한 모형이지만 기술적 타당성을 높이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결합을 극복해주지도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 정책결정의 산출지향적 모형과 과정지향적 모형

- (1) 산출지향적 모형 : 행정학자들이 중시하는 규범적 · 이상적모형으로서 정책결정기준으로서의 '합리성'을 중시하며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는 정책결정모형
- (2) 과정지향적 모형 : 정치학자들이 중시하는 설명적 · 서술적모형으로서 정책과정의 참여자로서의 '권력성'을 중시하며 정책과정을 다루는 정책의제모형(다원론과 엘리트이론 등)

산출지향적 모형(합리성 모형)	과정지향적 모형(권력성 모형)
합리포괄모형 - 완전한 합리성	국가주의(조합주의)
만족모형 - 제한된 합리성	다원론(집단모형)
점증모형 - 정치적 합리성	엘리트모형
혼합주사모형 - 합리+점증	체제모형
최적모형 - 초합리성+합리성	마르크스주의

13

중요도 □□□ 난이도 ■■■

2021 국회9급

규제개혁 전담기관, 대상, 전략 등을 체계화한「행정규제기본법」이 최초로 제정된 시기는?(참고: 2021년 현재 21대 국회)

- ① 제15대 국회 ② 제16대 국회
③ 제17대 국회 ④ 제18대 국회
⑤ 제19대 국회

2021 9급 선행정학 p.59

정답 · 해설

답 ①

「행정규제기본법」은 1997년 김영삼정부, 15대국회(1996.5~2000.5)에서 제정되었다.

역대 국회별 임기

역대 국회	임기
15대 국회	1996.5.~2000.5.
16대 국회	2000.5.~2004.5.
17대 국회	2004.5.~2008.5.
18대 국회	2008.5.~2012.5.
19대 국회	2012.5.~2016.5.
20대 국회	2016.5.~2020.5.
21대 국회	2020.5.~2024.5.

14

중요도 ■■■ 난이도 □□□

2021 국회9급

〈보기〉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보기〉

- ㄱ.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 System)는 계량화된 정보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관리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ㄴ. 계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는 계획-사업-예산의 체계적 연계를 강조하며, 주요 관심 대상은 사업의 목표이나, 투입과 산출에도 관심을 둔다.
ㄷ.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ing System)는 주어진 재원 수준에서 달성한 산출물 수준을 성과지표에 포함한다.
ㄹ. 영기준 예산제도(Zero-based Budgeting System)는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총체주의 방식의 예산제도로 예산 편성에 비용·노력의 과다한 투입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ㅁ.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며, 우리나라는 1998년 공식적으로 도입했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2021 9급 선행정학 p.646

정답 · 해설

답 ②

ㄱ, ㄴ, ㄹ은 옳고, ㄷ, ㅁ은 틀리다.

- ☑ ㄱ [○] 성과주의예산은 단위원가와 업무량을 곱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ㄴ [○] 계획예산은 기획과 예산을 연계시키는 기획중심의 예산으로 정책목표를 중시하지만 투입과 산출에도 관심을 갖는다.
ㄷ [×] 품목별예산은 산출이나 성과보다는 **투입 중심**의 예산이다.
ㄹ [○] 영기준예산은 합리주의예산이지만 계속사업까지 모두 분석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이 과다하게 투입된다는 단점이 있다.
ㅁ [×] 우리나라 프로그램예산제도는 **2007년** 도입되었다.

12

2021 국회9급 행정학 기출문제

〈보기〉의 공익에 대한 설명들을 두 가지 상반되는 이론으로 적절하게 묶은 것은?

〈보기〉

- 가. 공익은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행정에 구체적인 기준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 나. 공익은 다수의 이익들이 조정·타협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결과이다.
- 다. 공익의 실체는 도덕적 절대가치이다.
- 라. 민주적 절차의 준수에 의해서 공익이 보장된다.
- 마. 공익은 사회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공동의 이익이다.

- ① (가, 나) / (다, 라, 마) ② (가, 라) / (나, 다, 마)
- ③ (가, 나, 다) / (라, 마) ④ (가, 나, 라) / (다, 마)
- ⑤ (가, 나, 마) / (다, 라)

☞ 우리나라 성과중심의 재정제도 도입연도

1994	총사업비
1999	예비타당성조사
2003	재정사업 목표관리
2005	자율편성제도, 재정사업자율평가, 통합재정
2006	재정사업 심층평가
2007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D-BRAIN, 프로그램예산
2008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
2010	조세지출예산, 성인지예·결산
2011	주민참여예산제도 의무화

2021 9급 선행정학 p.88

정답·해설

답 ④

공익의 실제설과 과정설을 분류하라는 문제로 가, 나, 라는 과정설의 특징에 해당하고, 다, 마는 실제설의 특징에 해당한다.

- ☑ 가,나,라 [과정설] 공익은 집단간 타협과 협상의 결과로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다원적이고 유동적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중시하는 과정설의 특징에 해당
- 다,마 [실체설] 공익은 도덕적·절대적 실체로서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으로 실제설의 특징에 해당

〈보기〉의 설명과 근무성적평정 방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 ㄱ. 평정자의 직관과 선함을 바탕으로 하여 평정하기 때문에 작성이 빠르고 쉬우며 경제적이라는 강점이 있으나, 연쇄효과가 나타나기 쉽다.
- ㄴ. 협의를 통해 목표를 정하는 등 평정자와 피평정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평정하기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수 있다.
- ㄷ. 평정자가 평정서에 나열된 평정 요소에 대한 설명이나 질문 중 피평정자에게 해당하는 사실 표지 항목을 골라 표시하게 하는 방법이다.

	ㄱ	ㄴ	ㄷ
① 목표관리제 평정법	주기적 검사법	체크리스트법	
② 도표식 평정척도법	행태기준평정척도법	산출기록법	
③ 행태관찰척도법	목표관리제 평정법	산출기록법	
④ 행태관찰척도법	행태기준평정척도법	체크리스트법	
⑤ 도표식 평정척도법	목표관리제 평정법	체크리스트법	

공익의 실제설과 과정설의 비교

실제설	과정설
적극설, 공익 중시	소극설, 사익 중시
전체주의, 비민주적	개인주의, 민주적
선형적	경험적
공익 ≠ 사익의 합	공익 = 사익의 합
의사결정의 합리모형, 의제설정의 내부 주도형	의사결정의 점증모형, 의제설정의 외부주도형
개도국	선진국
권위주의, 엘리트주의, 국가주의	다원주의, 민주주의
국가우월주의, 정부는 적극적 목민관	국민주권주의, 정부는 중립적 조정자
도덕적 절대가치로서의 공익	적법절차 준수의 결과로서의 공익
Plato, Rousseau, Aristotle 등	Soraul, Hume, Bentham, Schubert 등

2021 9급 선행정학 p.533

정답 · 해설

답 ⑤

⑤가 맞다.

- ☑ ㄱ 도표식 평정척도법에 대한 설명이다.
- ㄴ 목표관리(MBO) 평정법에 대한 설명이다.
- ㄷ 사실표지법(체크리스트법)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 중에서 주민직접청구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감사청구 ② 주민소환
- ③ 주민투표 ④ 주민소송
- ⑤ 주민청원

☞ 근무성적평정 방법

평정 기법별	산출기록법	일정기간 생산고(근무실적)를 수량적으로 평가
	도표식평정척도법	가장 많이 이용되며 한편에는 실적·능력 등의 평정요소를, 다른 한편에는 우열을 표시
	가감법 ↳ 가감점수법	긍정·부정적 행동요인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절대평가
	서열법	피평정자를 서로 비교하는 상대평가
	사실표지법	4~5개의 사실표지 항목 중에서 해당 항목을 골라 표시하는 체크리스트 방법
	강제선택법	4~5개의 체크리스트 단문 중 강제선택(강제사실표지법)
	강제배분법	집단적 서열법으로 우열의 등급에 따라 구분한 뒤 분포 비율에 따라 강제로 배치
	중요사건기록법	근무실적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건들을 평정
	행태기준척도법	평정의 임의성·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 도표식척도법에다 중요사건기록법을 가미(중요한 과업분야별로 과업 행태를 등급화하여 점수화)
	행태관찰척도법	행태기준척도법 + 도표식평정척도법(행동간 상호배타성을 극복하고 관찰빈도를 척도로 표시)
평정 주체별	목표관리법	근무과제이나 태도보다는 결과중심의 평정
	감독자 평정	상급자가 평정하는 전통적 방법. 수직적 계층구조가 강한 기계적 구조에 적합
	다면(집단)평정	감독자뿐 아니라 부하, 동료, 민원인까지를 평정주체로 참여시키는 방법(전방위평정)
	자기평정법	피평정자가 자신의 근무실적을 스스로 보고하는 방법

2021 9급 선행정학 p.850

정답·해설

답 ③

“주민직접청구제도”라는 용어의 의미가 약간 불분명하지만 출제의도는 “주민이 직접 청구하는 제도”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볼 때 나머지는 모두 주민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만 성립되는 제도이지만, 주민투표는 반드시 주민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의회가 청구할 수도 있고,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할 수도 있으며,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부칠 수도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주민투표제도가 가장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 ☑ ① [○] 주민감사청구는 주민이 직접 상급단체장이나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 ② [○] 주민소환은 주민이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지방공직자의 해임을 관할선관위에 청구하고 주민이 투표로 가부를 직접 결정하는 제도이다.
- ④ [○] 주민들이 위법·부당한 재무행위에 대하여 주민감사청구를 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행정법원에 소송을 직접 청구하는 제도이다.
- ⑤ [○] 주민이 자치단체 행정에 관한 희망이나 불만사항을 지방의회에 문서로 직접 청구하는 제도이다(「지방자치법」 제73조).

우리나라의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예비타당성조사대상 사업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은?

- ①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 ② 문화재 복원사업
- ③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 ④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 사업
- ⑤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율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2021 9급 선행정학 p.686

정답 · 해설

답 ④

지능정보화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다.

☑ ①②③⑤ [○] 모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해당한다.

☑ 총사업비 관리제도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비교

	총사업비 관리	예비타당성 조사
개념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미리 정하여 기재부장관 과 협의하게 하는 재정통제제도	대규모 개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재부장관이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사전에 조사하는 재정통제제도
목적	착수된(시작된) 대형사업의 총사업비 팽창을 막기 위한 사전적·과정적 통제수단 * 설계변경 등으로 총사업비나 사업기간 변경시 기재부장관은 타당성 재조사 실시 및 국회에 결과 보고	대규모사업의 신중한 착수를 위한 사전적 통제수단(착수전 사업) * 중앙관서장의 신청 또는 직권, 국회의 요구로 기재부장관이 실시하고 결과를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
도입시기	1994년	1999년
법적근거	「국가재정법」 제50조, 총사업비 관리지침	「국가재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지침
대상사업	국가가 직접 시행 또는 위탁사업, 국가예산·기금의 보조를 받아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다음 사업 ①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이 300억 이상인 토목 및 지능정보화사업 ② 총사업비가 200억 이상인 건축사업 ③ 총사업비가 200억 이상인 연구개발사업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이 300억 이상인 신규사업 중 다음 사업 ①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② 지능정보화사업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제외대상]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고등학교, 문화재복원, 국방·안보·보안사업, 기존 시설의 단순개량·유지보수 등

19

중요도 ■■■ □ 난이도 ■■■ □

2021 국회9급

국회의 예·결산 심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시정연설을 들어야 한다.
-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또는 결산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 ⑤ 위원회가 예산안 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2021 9급 선행정학 p.674

정답 · 해설

답 ③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어야 하지만 **결산에 대해서는 시정연설을 듣지 않는다**(「국회법」 제84조).

- ☒ ①②④⑤ [O] 모두 「헌법」 또는 「국회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맞는 지문이다.

20

중요도 ■■■ □ 난이도 ■■■ □

2021 국회9급

다음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보격차로 인한 시장실패를 예방하는 정부 개입의 대표적 사례로 미국의 레몬법이 있다.
- ② 월슨(J. Q. Wilson)은 규제에 의한 비용은 분산되고 규제의 편익이 집중되는 상황을 이익집단정치로 정의하였다.
- ③ 정부실패 원인 중 파생적 외부효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다.
- ④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은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의 신설·강화 규제심사 시 활용되고 있다.
- ⑤ 네거티브 규제는 기본적으로 행동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규제방식이다.

2021 9급 선행정학 p.54

정답 · 해설

답 ①

- ①만 옳고 나머지는 모두 틀린 지문이다. 미국의 「레몬법」이란 제품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제조회사가 의무적으로 교환·보상·환불해주도록 규정한 소비자보호법으로 소비자가 정보부족으로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먹었더니 먹어보니 신 레몬이었다는 의미의 법이다.

- ☒ ② [X] 월슨의 규제정치모형에서 비용이 분산되고 편익은 집중되는 경우는 이익집단정치가 아니라 **고객정치**에 해당한다.
- ③ [X] 정부실패원인 중 파생적 외부효과란 섰부른 규제나 유인이 초래하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므로 **규제 완화나 보조 삭감**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 ④ [X] 규제영향분석은 비용편익분석기법을 규제분야에 적용한 것으로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할 때** 규제에 의한 비용(부담)과 편익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정은 되어있으나 아직 효율적인 시행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본격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 ⑤ [X] **반대이다**. 네거티브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만 금지하는 규제방식이다.